

## 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2.20)

□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### [ **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** ]

□ 먼저,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」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,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·민법 원칙에 위배되고,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.

- 첫째,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.
- 둘째, 부당노동행위,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.
- 셋째,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,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\*을 훼손하고,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\* 민법 760조 : ①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□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,

-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,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\*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.

\*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.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

□ 이에 정부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

[ ❶ 新성장 4.0 전략 '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]

-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 
수출·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
  -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 
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 
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 
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.
-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,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 
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 
「新성장 4.0 전략 추진계획」을 발표한 데 이어,
  - 미래형 모빌리티·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 
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 
금년중 30여개(상반기 중 20여개)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  -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,  
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.
- 신성장 4.0 전략 주요 프로젝트의  
올해 추진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,
  - ❶ 우선, 도심항공 모빌리티(UAM) 분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 
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 
실증비행 테스트(전남 고흥)를 착수하고,
    -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\*, 정밀도로지도 3,400km  
추가 구축(23년 누적 3만km)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    - \* 현재 복수(DSRC / LTE-V2X)의 통신방식 검토 중
  - ❷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,  
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  
개발·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하고,
  - ❸ 미래의료 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K-바이오백신 펀드  
5천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·치료제 개발을 위한  
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- ④ 아울러, 돌봄, 교육, 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'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'를 6월까지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,
- 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(net-zero)인 도시 '넷제로 시티'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- ⑥ 스마트그리드의 경우,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·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\*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.

\*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에 2개소 운영 중

## [ ②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]

- ☐ 다음은 신성장 4.0 전략의 첫 세부대책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\*한 물류산업을 AI, 드론, 로봇 등 첨단기술과 접목, 스마트 물류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.

\* 국내 물류시장 규모 : ('18년) 89.5조원 → ('21년) 155조원

- ☐ 무인배송 법제화,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\*(현 33개) 확대,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,

\* 드론 비행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 가능

-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(MFC)\*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.

\* MFC(Micro Fulfillment Center) : 인근 지역의 주문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상품을 보관하여, 주문 즉시 배송하기 위한 소규모 물류시설

- ☐ 또한, 낙후된 물류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물류·상업·주거·문화시설이 융·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\*하는 한편,

\* 서울(3개소) : 양재동(하림), 신정동(서부T&D), 시흥동 / 청주(1개소) : 흥덕구 지동동

-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 
규제도 완화(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)하겠습니다.

### [ ③ K-Network 2030 전략 ]

- 다음으로 「K-Network 2030 전략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네트워크는 국민의 일상과 떼어 수 없는 필수재이자  
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서,  
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점을 위한  
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하여,  
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 
시연토록 하겠습니다.
- 이를 위해,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 
6천억원 규모(예타 심의중)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,  
네트워크 분야 정부 R&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 
지난해 9%에서 내년에는 60%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- 또한, 해외 의존도가 높은 6G 핵심 품목들의  
기술자립화를 위한 R&D를 적극 지원하고,  
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등  
보안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겠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어서 국토부 장관님,  
과기정통부 차관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  
(국토부 장관 및 과기정통부 차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